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◇ 개정 전자금융거래법('23.9.14. 개정, '24.9.15. 시행) 후속조치로
①선불, ②BNPL, ③PG 관련 시행령 개정

1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

1. 선불업 등록 대상

-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 설정: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

2. 선불충전금 보호 : 별도관리 → 운용 → 환급

- ①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: 예치, 신탁(특정금전신탁), 보증보험
 -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예치의 경우 은행·채신관서,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(은행·보험과 같은 겸영 포함),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
- ② 선불충전금 운용: 예금, 국·공·지방·은행채, 지급보증증권, CD, RP,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*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
 - * 예: MMF, A등급 이상 회사채(등급별 한도 설정)
- ③ 선불충전금 환급절차: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
 - 평시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을 축소하는 경우* 이용자 청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액 환급
 - * 다만, 법령위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인 경우 등은 제외

3. 기타 의무

- ① 선불업자 중 부채비율 200%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만 할인발행, 적립금 지급 등 가능
- ② 선불을 예금·타 사업자가 발행한 선불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

2 소액후불결제(BNPL) 관련

1. 승인요건 : 주식회사, 자본금 50억원, 부채비율 180% 이하 수준

- 주식회사·부채비율은 카드사 요건을 감안하고, 자본금은 전자금융업 중 최대 자본금인 전자화폐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
 - 그 외 포용적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 구축 의무

2. 서비스범위 및 금지행위

- ① 이용자별 한도: 30만원
사업자 총제공한도(분기말): 전분기 결제(선불+후불)규모의 15%
- ② 금지업무: 할부, 리블빙, 현금서비스 금지
- ③ 구매금지품목: 예금, 사행성 업종 등 신용카드와 동일 수준
- ④ 금지행위: ①연체이자 외 이자수취 금지, ②별도 가맹점수수료 수취 제한, ③신용카드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지

3. 경영건전성 · 신용정보 · 채권회수

- ① 경영건전성: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손충당금·대손준비금 적립
- ② 연체정보 공유: BNPL 사업자간 대안신용평가를 위한 공유* 가능
 - * 포용적 금융 성격을 고려, CB사에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목적으로만 공유 허용
- ③ 채권회수 관리: 연체채권의 대부업자 등 매각추심 금지

3 전자지급결제대행(PG) 관련

- ① 상위 PG사에 대해 미등록 PG사와의 가맹모집 계약 체결을 금지*
 - * 등록 PG사 여부 확인 및 등록 PG사와만 가맹계약 체결
- ② 하위 PG사→상위 PG사→결제업자(직·선불)에게 재화·용역 공급 가맹점 상호·사업자번호, 거래대행내용 등 정보 제공 의무